

# 尹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할 듯

하청 노동자 원청기업 책임강화 내용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정부·여당 ‘불법파업’ 우려  
“노란봉투법, 민노총 구제법”  
野 “정상적으로 공포하라” 압박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C) 정상회의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영국 국민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마친 후 첫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견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

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 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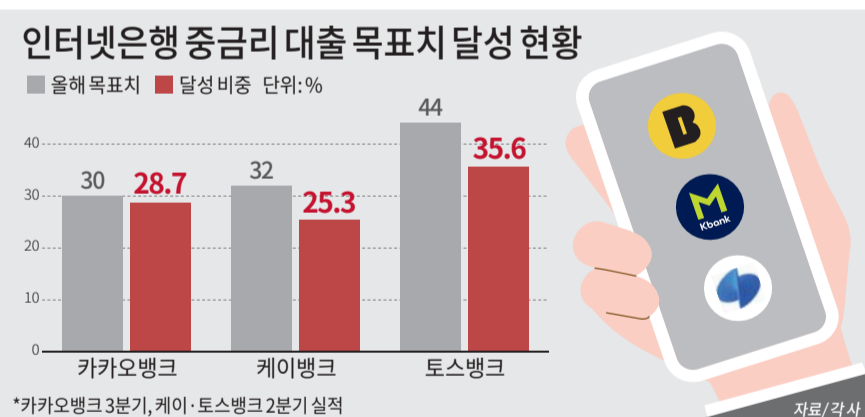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한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조성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목표달성 ‘난망’

은행연합, 은행별 목표치 30~44%  
“주담대 등 안전자산 늘려야 하지만  
규제 강화로 중금리대출 속도 더뎠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당국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만 늘릴 경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지난 10월 신규취급한 8% 미만~10% 이상인 중금리대출 비중은 평균 16.7%로 집계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 10.84%보다 높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KCB 기준 820점이하)에게 공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은 8.5%다.

◆주담대 등 제도…“중금리 목표 달성 어려워”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유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춰 중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가계신용대출 대비 중금리대출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다만, 이들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28.7%다. 아직 실적발표를 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8월말 기준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25.3%, 35.6%로 1.3~8.4%포인트(p) 올려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을 늘리면서 중금리대출(신용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당국 규제로 담보대출을 늘리는 게 어려워지면서 중금리 대출속도도 더뎠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작정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체율·대손충당금 부담 ↑  
여기에 늘어난 중금리 대출만큼 연체율도 오르는 상황이다.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연체율은 0.49%로 1년전(0.36)과 비교해 0.13%포인트(p)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금액도 1505억원으로 같은 기간(809억원) 2배가량 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은행이 공급한 대출금액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대출채권을 말한다.

아직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케이뱅크의 2분기 기준 연체율은 0.86%로 1년전(0.52%)과 비교해 0.34%p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금액도 지난해 2분기 521억원에서 올해 2분기 1239억원으로 늘었다.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같은기간 0.15%에서 1.56%로 1.41%p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36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220조7000억원)과 비교해 66% 늘었다. 부실채권대비 대손충당금 잔액비중은 같은 기간 273%에서 243%로 줄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했다. 케이뱅크는 221%에서 184%로, 토스뱅크는 비중은 1435%에서 227%로 줄었다. 고금리 상황 등이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노조법, 기업 수출·투자 확대의지 위축”

방문규 장관, 수출현장방문단 간담회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 우려 표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에 끼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 장관은 12일 ‘2023 중견기업 주간’(11.9~17)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견기업들을 방문해 제3차 수출현장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노조법은)기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송두리째 바꾸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수출·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개월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상외교 성과와 더불어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지탱하는 중견기업들이 수출 회복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수출동력으로 추진 중인 의료로봇 관련 실증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 의무구매대상 확대 방안 ▲영세 협력사에 대한 무역통상 실무교육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 개막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첫 주말을 맞아 할인행사가 진행중인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방문해 패션 매장을 둘러보며 업계에 불가안정노력을 당부하고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라이브 방송에서 송해나와 마베언니가 ‘코세페로 완성하는 가을/겨울 패션’을 주제로 코세페 행사 의류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추천하자, 방 장관은 추천의류를 직접 입어보며 국민들에게 소비를 장려했다.

롯데백화점은 코세페를 맞아 이날까지 패션 페어,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진행하고, 17일부터는 주요 패션브랜드 할인행사(10~50%)와 제휴카드 사은행사(7%)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쇼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코세페를 준비했다”며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 진작 행사가 되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